

2차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발전 계기로

文 “새로운 시대” 金 “가까워지는 과정”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열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 발전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모두발언에서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대접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자 “평양을 방문해서 제대로 대접받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남북 정상이 쉽게 만나자, 좋다, 이렇게 했을 때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남북 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게 아닌가(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런 계기(정상회담) 통해서 마음이 더 가까워지고, 평양과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金 “최선의 노력, 결과 만들 것”

文 “판문점 회동 새 시대 징표 북미회담 성공하길” 독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리고 재안해놓고 하루 만에 인사드려보도록 써”라며 이번 두 번째 회동이 지난 25일 북측의 제안에 의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만 배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심도 있는 대화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회담을 시작할 때와 달리 바깥 마른 입술로 마무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결과를 만들겠다”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환경,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합의) 돼야 북남관계의 문제도 해결하고 나갈 수 있다. 다 연결되는 문제들”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4월27일 회담 때) 북남문제 중요한 시기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진지한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했는데 오늘은 실질적으로 보여준 첫 행동”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각자 책임 짓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다. 이에 문 대통령은 “4·27 회담 이후 남북 간 대화에서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고, 조미 정상회담이라는 아주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있다”며 “(남북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이번 회담이 아주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과거에는 남북 정상이 마주 앉으려면 긴 시간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 필요할 때 기회가 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

는 하나의 징표라고 본다”며 “김 위원장이랑 남북관계를 함께, 남북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미 회담에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독려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 “남북미 3자 정상회담 통해 종전선언 추진됐으면”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브리핑 일문일답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

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 뒤 가진 일문일답에서 ‘남북미 정상이 3자간 하타인 통화를 하는 것이 어렵가’라는 질문에 “사전에 남북미 3자간 정상회담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타인 통화라는 것이 즉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통신 회선이 후크(연결) 돼야 한다”며 “최근 남북간에는 회선이 개설됐고, 북미 간에도 앞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트럼프, 북미회담 재추진… “내달 12일 싱가포르 바뀔 것 없다”

“북미회담 논의 매우 잘돼가고 있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문 대통령도 “2차 북미회담 논의 내용 트럼프에 전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6일(현지시간) 북미 회담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의 미국인 석방을 환영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 중 기자들에게 원래 예정된 대로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논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6월 12일 싱가포르를 살펴보고 있다. 이 점은 바뀌지 않았다. 매우 잘 되어 가고 있다. 어떻게

될 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트럼프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대화도 잘 진행 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의 정상회담과 관련된 해 우리는 매우 잘 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가 말한 대로 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미국, 북한 양국과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다”면서 “어제(26일) 김 위원장과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다시 합의된다고 해도 6월 12일 개최는 어렵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반박했다. 그는 “방해하는 NYT가 존재하지도

않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회담이 되살아나도 시간과 준비 부족을 고려할 때 6월 12일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며 “또 틀렸다. 가짜 소식통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쓰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정부 내 대북 정책 기초에 이견이 있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이로써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취소 발표로 좌초 위기에 처한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가 이틀 만에 되살아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24일 김 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적대적 발언들을 고려할 때 회담 개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북한과 관련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기존의 정상회담이 개최되거나 나중에 열릴

수도 있다”고 말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반전이 있을 여지를 남겨 놨다.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며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는 이에 “따뜻하고 생산적인 성명”이라며 회담 개최 가능성을 다시 시사했다.

26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예정에 없던 두 번째 회담을 진행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27일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을 통해 “우리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회 개헌 기대 내려놓는다”

문 대통령, 개헌안 투표 무산에 입장문 직접 내

“국회, 헌법 위반하고 개헌안 따로 발의하지도 않아

국민과의 약속 지키지 못해 송구… 동력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쫓발 민심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이 끝내 무산됐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운을 떼었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면서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면서 “진심이 없는 정치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끝맺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 표결 전 이날엔 국무총리가 대독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주요 정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하면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개헌이 시대의 요구란 인식을 여야가 공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특위를 구성해 헌법개정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개헌논의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며 “국회의 개헌논의만 기다리다가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 투표란 여야 공종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선거일에 개헌국민투표를 함께 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정해진 기간 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권은 개헌안 추진은 국회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국회는 개헌안 표결 시한인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했다. /뉴시스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명단

“이름(정당·성별·나이·재산·병역·현 체납액·전과순), 더불어민주당·민·자유한국당·한/바른미래당·미/민주당·평/정의당·정/민중당·중/무소속·무

<전북도지사>

▲송하진(민·66·15억2300만원·군필·0·없음)▲신재봉(한·65·1억4800만원·군필·0·없음)▲임정엽(평·59·10억6100만원·미필·0·2건)▲권태홍(정·53·2억2200만원·미필·0·2건)▲이광석(중·67·-1200만원·군필·0·4건)

◇김제시장

▲박준배(민·62·7000만원·군필·0·없음)▲정성주(평·53·2억8400만원·미필·0·2건)

◇원주군수

▲박성일(민·63·8억8900만원·군필·0·없음)▲박재완(평·50·12억9100원·군필·0·없음)

<전북교육감>

▲김승환(64·6억6300만원·군필·0·1건)▲서거석(64·6억5100만원·미필·0·없음)▲이재경(63·6억7764만원·군필·0·없음)▲이미영(여·64·9900만원·해당없음·0·없음)▲황호진(56·5억1900만원·미필·0·없음)

◇진안군수

▲이항로(민·61·-1억6300만원·군필·0·없음)▲이충국(평·63·3억8800만원·군필·0·2건)▲박수우(무·38·2억2800만원·군필·0·1건)

◇무주군수

▲백경태(민·56·-5000만원·군필·0·1건)▲황인홍(무·62·-8000만원·군필·0·1건)

<전북 기초단체장>

◇전주시장

▲김승수(민·49·2억9500만원·군필·0·없음)▲이현웅(평·55·14억원·군필·0·없음)▲오형수(정·55·4억5500만원·군필·0·5건)

◇장수군수

▲장영수(민·50·4억8600만원·미필·0·없음)▲김창수(무·64·8억3800만원·군필·0·없음)▲이영숙(무·여·62·5억6800만원·해당없음·0·1건)

◇군산시장

▲김일준(민·62·8400만원·군필·0·2건)▲이근열(한·44·-13억8000만원·군필·0·2건)▲진화원(미·53·3억2600만원·군필·0·없음)▲박중서(평·71·12억6800만원·군필·0·없음)▲서동석(무·58·4억9500만원·군필·0·없음)▲김용경(무·54·-1억6700만원·군필·0·없음)

◇임실군수

▲전상두(민·61·9억6300만원·미필·0·2건)▲박기봉(무·63·6600만원·군필·0·없음)▲심민(무·70·1억3000만원·미필·0·1건)

◇익산시장

▲김영배(민·63·42억1900만원·군필·0·없음)▲정현율(평·60·1억4300만원·군필·0·없음)

◇순창군수

▲황숙주(민·70·11억6400만원·군필·0·없음)▲홍승채(평·57·9600만원·군필·0·5건)▲강인형(무·71·10억3700만원·군필·0·1건)

◇정읍시장

▲유진섭(민·51·-1500만원·군필·0·없음)▲정도진(평·57·2억3100만원·군필·0·없음)▲한병욱(정·47·3억3900만원·군필·0·없음)▲김용재(무·64·5700만원·군필·0·2건)▲강광(무·81·23억1300만원·군필·0·없음)▲이학수(무·57·14억9000만원·군필·0·없음)

◇고창군수

▲박우정(민·73·36억5700만원·군필·0·없음)▲유기상(평·61·3억5100만원·군필·0·1건)

◇남원시장

▲이환주(민·57·16억200만원·군필·0·없음)▲김영권(미·71·4억8600만원·군필·0·없음)▲강동원(평·65·-300만원·군필·0·3건)▲박용섭(무·61·3억4300만원·군필·0·없음)

◇부안군수

▲권익현(민·57·8300만원·군필·0·없음)▲김경민(미·63·9억1700만원·군필·0·없음)▲김상곤(평·48·7억1200만원·군필·0·2건)▲김종규(무·66·1억2400만원·군필·0·1건)

구독·광고문의

288-9700